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재정 지출 극대화도 경기 부양

“재정 88조8천억 남김없이 모두 집행”

성장률 5.1%로 상향...재벌정책 후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이 경기부양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의 큰 틀은 지난해 말 수립한 올해 전체 운용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정지출 극대화, 비과세·감면 연장, 건설투자 보완, 기업 규제 완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정책이 모두 포함됐다.

▷성장률 5.1%로 상향=정부는 하반기 국내 경제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견조한 데다 하반기에 재정 지출을 극대화하면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반기 5.8%, 하반기 4.5%로 연간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전망치 5.0%보다 소폭 올려 잡았다.

민간소비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당초 전망대로 4.4% 증가를 유지했고 설비투자는 당초 예측치인 6.5%보다 높은 7.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건설투자 증가는 2.0%보다 훨씬 낮은 0.7%로 내려 잡았다. 제조업의 고용 부진 등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규모는 37만5천명에서 35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부양에 총력=최근 실물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지표는 계속 하락했고 유가와 환율 등 대외 변수들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에서 금리 인상 억제, 건설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조기 폐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 각종 세금 감면제도 기한 연장 등 16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사실상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달라는 주문이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재정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재정 88조8천억원에 대한 이월·불용

■2006년 하반기 정부 및 주요기관 경제전망

Table with 7 columns: 기관, 정부, 한은, KDI, 삼성, 금융, LG. Rows include 성장률,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역달러), 소비자물가, 일자리(만개).

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상 재정의 사업비는 연간 단위로 1조~2조원 안팎의 이월·불용액이 남지만 올해는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하반기 재정의 사업비는 상반기에 재정집행이 집중됐던 지난해 하반기의 67조3천억원보다 21조5천억원이 나 많다. 이월금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조항 중 서민,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유연하게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와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재벌정책 후퇴 논란=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과 재벌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애초 지방선거 이후 발표하기로 했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입법 작업을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한

발 후퇴한 데 이어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조항 중 상당 수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물러섰다. 또 출총제 대안 마련과 관련, 출총제의 조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요구가 반영되면 재벌정책의 후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 “재정 지출 극대화 긍정적”=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의 사업비 지출 극대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체감경기 회복과 내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경기 하강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재정지출을 과격적이거나 과도하게 늘리겠다는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극대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北 미사일 발사

내년 對北사업 관련 예산 1조1,820억 집행 불투명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관련 예산의 집행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달에 통일부가 기획처에 요구한 북한 관련 내년 예산은 1조1천820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2천28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12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에서 1조6천600억원의 북한관련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을 일반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적 시선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라 기획처에는 4천780억원을 줄여 요청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일부가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대북 송전사업 관련 예산으로 5천460억원을 제시했다가 기획처에는 최소비용인

680억원으로 축소해 신청했다”며 “송전사업비 680억원은 사실상 올해 책정했으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요구한 1조1천820억원에 대해서도 심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달에 요구한 내년도 북한관련 예산안중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경제분야협력기반 조성사업비는 4천600억원으로 올해의 5천600억원보다 줄었다. 대북 식량차관 관련 예산 요구액은 1천920억원으로 올해의 1천540억원보다 24.7%가 늘어났다.

또 이산가족 교류 예산은 206억원에서 421억원(통일부 요구액)

으로 늘었고 인적 왕래 관련 요청액은 6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영유아 지원을 위한 요구액은 내년에 230억원으로 올해의 250억원보다 다소 감소했다.

기획처는 이런 요구액에 대해 심사를 뒤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신동력협력사업 2천960억원의 집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사업 예산은 경공업 1천500억원, 광업 300억원, 수산업 190억원, 농업 820억원, 과학기술 150억원 등으로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획처는 전했다.

올해 예정됐던 송전 관련 예산 680억원이 이미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다. /연합뉴스

금통위, 콜금리 동결 가능성

미사일 파문... 금융시장 동요 우려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이달 금통위에서 콜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가.

6일 한국은행과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6월 금통위에서 콜금리가 연 4.25%로 0.25%포인트 인상됨으로써 7월 금통위에서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콜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금통위가 지금까지 두달 연속 콜금리를 올린 전례가 없었던 데다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각종 체감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이 분석의 배경이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이라는 악재가 겹침으로써 이달말 콜금리 추가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 집행부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로 인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나 5일 한은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미사일 발사 파문으로 인한 금융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합동으로 금융시장 동향 점검반을 설

치하는 등 한은 내부 분위기가 자라는 비상상황에 가깝다.

한은은 특히 매일 금융시장 종료를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금융시장 동향’이라는 업무정보를 언론에 배포하기로 하는 등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한 딜러는 “외환·증권시장과 자금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콜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을 시장에 던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파장이 진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됐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금통위가 관망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통상적인 의견이다. /연합뉴스

“경기부진 내년까지 지속”

삼성금융연구소

삼성금융연구소는 6일 국내 경기가 올해 하반기 하강하고 이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날 ‘7월 금융리포트’를 통해 “국내 경제는 내수 증가세 확대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중 경기 하강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따라서 올해 1~4분기 6.1%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하반기에 3.5% 안팎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세계적인 금율 긴축으로 하반기 이후 저금리·저물가·고성장 기조가 퇴조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고 한국 경제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하반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4.0%보다 높은 4.5%를 기록하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가 2007년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 부진도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 자산 가격 버블 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 1~2회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상 폭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변덕날씨엔 ‘박쥐상품’이 딱!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선보인 ‘박쥐상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박쥐상품은 비가 오면 불어서 깎팔로 활용하고, 더운 여름철엔 팔꿈치 이뺨부분을 떼어내 반팔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패션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크게 오른다

공공주택 후분양제·기반시설부담금 등 상승압력 거세

올 하반기 이후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달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공공아파트의 후분양제가 도입되는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6일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 요인만 늘고 있다. 수요는 없는데 분양가만 올라갈 경우 주택경기가 휘청거릴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아파트, 재건축 후분양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등 공공아파트의 후분양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작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을 하는 현행 ‘선분양’ 제도 아래에서는 땅값과 공사비를 일반 분양자에게 받아 충당해왔지만 후분양을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1~2년 가까이 늦게 들어와 그동안 공사비를 모두 사업주가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도 눈덩이=이달 12일부터 건축 연면적 60평이

넘는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분양가 상승 요인이다. 만약 서울 강남구 20평형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2평형을 배정받으면 부담금이 1천246만원, 같은 조건의 일반분양 아파트는 3천303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곧바로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반면 아파트 사업부지가 땅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분양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신용·경제 분리 본격 추진

농림부, 오늘 첫 회의

농림부가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떼어내는 신·경분리 정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림부는 올해 1월 발족한 신·경분리

리위원회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까지 포함시켜 총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 구성해 7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 추진계획안을 제출하면 농림부 장관

이 이를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작년 7월 개정된 농협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안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6월말 농협이 제출한 신·경분리 추진 계획안의 추가 소요 자본금 등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아파트 대출 환영 月0.58%(年7%) 시중은행대출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年 5.32% 무등저축은행 T.(062)223-5506

함께 일합니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